

재정패널 10주년, 그 의미와 성과*

최 승 문**

논문초록 2008년에 시작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가 2018년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0년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재정패널조사에 포함된 상세한 납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개요와 특징 및 문항 구성을 소개하여 재정패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재정패널조사가 학술적·정책적 연구 자료로 더욱 왕성하게 사용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핵심 주제어: 재정패널, 조세제도, 복지제도, 재정정책, 정책효과 분석

JEL 주제분류: H20, H31, H53

I. 서론

2008년도에 시작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가 2018년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0년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재정패널조사에 포함된 상세한 납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조세에 대한 가구 및 개인의 행태를 분석하여 경제 주체로서의 가구와 개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논문투고일: 2018. 2. 19. 심사완료일: 2018. 2. 26. 게재확정일: 2018. 2. 28.

* 재정패널 특별호 발간을 허락해주신 재정학연구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mail: evenschoi@gmail.com

크게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세 및 복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정책에 많은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조사 및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재정패널조사가 학술적·정책적 연구 자료로 더욱 왕성하게 사용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개요와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고, 제Ⅲ장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설문 구성과 주요 변수의 통계를 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 재정패널을 활용한 기존 연구 중 재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Ⅱ. 재정패널조사 개요 및 특징

재정패널조사는 조세 및 복지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시작되었다.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의 조세 및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특히 ‘국가재정법’에서도 강조되듯이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기존의 패널조사자료를 통해서서는 가구 또는 개인의 세금납부와 복지혜택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또한 일반 연구자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과세자료의 특성상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구 및 개인의 소득, 자산, 지출, 조세, 복지 등을 포괄하는 재정패널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재정패널조사는 조세 및 복지 정책이 가구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재정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이며, 모집단 자료(sampling frame)로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였다. 2008년도에 조사한 5,014가구와 2009년도에 추가한 620

가구가 원표본이며, 2차년도 이후 분가한 가구도 포함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차년도 가구 데이터를 통해 4,832가구,¹⁾ 가구원 데이터를 통해 7,809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9차년도 기준 원표본 유지율은 76.8%이며, 원표본 중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소멸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유효표본 유지율은 79.5%이다. 그리고 분가 표본 중 사망, 해외이주, 원가구 합가 등으로 소멸한 표본을 제외한 유효표본 유지율은 92.8%이다²⁾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조세 및 복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재정패널조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도록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통계자료를 이용해 고소득층 밀집지역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조사구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아래 표는 2010년 기준 재정패널 조사대상 가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같은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별 분포가 인구주택총조사와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재정패널조사 표본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조사와 차별화되는 재정패널조사의 주요한 특징으로 소득증빙서류 수집을 꼽을 수 있다. 소득, 연금·보험 지출,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를 응답자가 정확히 기억하기는 매우 어렵다. 재정패널조사에서는 이러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수집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소득공제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를 통해 소득, 납세 등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증빙서류는 응답자의 자발적 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수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차년도 기준으로 유효표본 가구 중 증빙서류를 1건 이상 제출한 가

-
- 1) 총 조사성공 가구인 4,864 가구에서 2015년 7월 1일 이후 분가한 32 가구를 제외한 수치. 해당 32 가구는 10차년도 조사부터 정식 표본가구로 인정.
 - 2) 재정패널 10차년도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 자료로 계산한 결과 10차년도 기준 원표본 유지율은 75.2%, 유효표본 유지율은 78.3%, 분가가구 유효표본 유지율은 92.0%임.

구가 40.2%이며, 특히 소득신고 가구원이 있는 가구 대상 수집률은 65.2%이다. 가구원 기준으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 중 61.2%,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중 40.8%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표 1〉 2010년 기준 조사대상 가구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가계동향	재정패널
성별	남자	48.9	47.1	48.3
	여자	51.1	52.9	51.8
연령	(평균)	(37.8세)	(36.2세)	(36.4세)
	20대 이하	35.9	37.9	37.6
	30대	16.6	16.3	18.0
	40대	17.5	18.1	16.6
	50대	14.0	12.6	12.7
	60대 이상	16.0	15.1	15.2
가구원 수	(평균)	(2.7명)	(2.7명)	(2.8명)
	1인 가구	24.2	20.4	17.5
	2인 가구	24.6	21.8	22.3
	3인 가구	21.3	21.4	25.1
	4인 이상 가구	30.0	36.5	35.2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 〈표 3〉을 재구성.

Ⅲ. 재정패널조사의 구성 및 주요 변수 통계

재정패널조사는 크게 가구에 대한 조사와 가구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된다. 가구 조사에서는 가구의 기본 현황과 함께 소득, 지출, 자산, 부채, 조세납부, 복지수혜 현황 등을 설문한다. 가구원 조사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 소득, 지출 및 납세 현황을 설문한다. 또한 가구원 의식조사를 통해 개인의 정치·사회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조사 유형별 조사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재정패널조사 설문문항 구성(10차년도 조사 기준)

가구 조사	가구원 조사
A. 가구 기본 현황 B. 주택, 종합부동산세, 자동차 보유 현황 C. 가계 지출 현황 D. 개인 이전 지출과 개인 이전 소득 E. 복지 현황 F. 자산·부채 현황 H. 근로장려금 I. 연말정산환급금 및 종합소득세환급금 J. 유가보조금 K. 출산	일반 항목 A. 경제활동 B. 소득·지출 현황 C. 근로소득세 공제현황 D. 종합소득세 공제현황 가구원 의식조사 a. 사회·정치에 대한 인식 b. 조세·복지제도 c. 납세 관련 태도 d. 조세·세무 행정 평가 e. 건강·은퇴 f. 위험회피

주: 3차년도 조사까지는 가구원 설문에 'G. 유가환급금'이 포함되었지만 해당 제도가 2010년 이후 폐지되어 4차년도 이후 조사에서는 설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아래 표는 9차년도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파악된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 유형별 평균 가구소득을 나타낸다.³⁾ 2016년에 조사된 9차년도 자료에서는 가구의 인적 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관련 항목은 2015년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표의 내용은 2015년의 연평균 가구소득이다. 2015년 가구 평균 소득은 4,596만원이며, 근로소득이 3,022만원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한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추정된 가구 평균 소득인 4,883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다⁴⁾ (통계청, 2016).

3) 10차년도 조사가 완료되긴 했지만 자료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9차년도 조사결과를 사용하였다.

4) 가구 평균 총소득 4,883만원 중 근로소득이 3,199만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한다. 이는 재정패널조사 결과 총소득 중 근로소득 비중인 65.8%와 매우 유사한 수준이다.

〈표 3〉 2015년 소득 유형별 가구 평균 연소득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근로소득		66.8	4,525.3	3,022.2
사업소득		31.6	3,002.8	949.6
부동산 임대소득	토지	0.6	709.2	4.3
	주택	6.1	993.7	61.1
	상가 및 사무실	2.9	2,065.8	60.3
	기타	0.1	1,196.8	1.2
이자 및 배당소득		3.1	397.2	12.5
기타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19.6	535.8	104.8
	노인요양특별급여	0.0	250.0	0.1
	그 외 기타소득	5.3	967.7	51.3
양도소득 /손실	양도소득	0.4	2,836.2	10.0
	양도손실	0.1	1,750.0	1.4
보험급여	사회보험 급여	17.2	532.3	91.6
	민간보험 급여	6.3	504.5	32.0
정부지원	정부지원 현금소득	24.0	352.0	84.5
퇴직관련 급여	특수직 퇴직연금	2.6	3,020.7	80.0
	특수직 퇴직일시금	0.1	3,366.7	2.1
	개인형 퇴직연금	0.2	1,323.4	2.2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0.9	2,804.1	26.1
연간 총소득*				4,595.7

주: * 가구 연간 총소득은 양도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표 29].

아래 표는 9차년도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파악된 조사대상 가구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규모를 나타낸다. 금융자산의 평균은 3,679만원, 부동산자산의 평균은 27,05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인 2015년 가구 평균 금융자산 9,290만원, 부동산자산 23,649만원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2016). 두 조사 간 자산규모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

은 재정패널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재정패널의 경우 전월세보증금을 부동산자산에 포함시키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금융자산에 포함시킨다. 재정패널조사의 전월세보증금 항목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가구 평균 금융자산은 6,591만원, 부동산자산은 24,144만원이 된다. 이 경우 부동산자산의 규모는 두 조사 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금융자산은 여전히 재정패널조사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표 4〉 가구 금융자산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76.3	3,491.0	2,664.5
펀드 가입 금액	4.0	2,693.7	106.5
채권 보유 금액	0.6	5,947.4	33.2
주식 보유 금액	5.6	4,830.8	272.0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13.8	2,602.9	357.4
빌려준 돈	7.4	2,218.9	163.2
기타 금융자산	1.1	7,519.2	82.5
금융자산 총액			3,679.3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표 32].

〈표 5〉 가구 부동산자산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61.7	24,840.2	15,310.4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12.4	30,856.8	3,764.3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13.5	23,255.0	3,075.2
주택 외 보유 부동산(건물)	3.9	52,598.9	1,993.7
주택 전월세 보증금(거주)	29.6	9,304.1	2,755.4
주택 전월세 보증금(비거주)	0.5	7,906.5	37.6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3.4	3,499.1	118.8
부동산 자산 총액			27,055.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표 33].

재정패널의 가구 조사에서는 가구 단위로 받는 복지혜택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그 예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유가보조금 등이 있다.

〈표 6〉 정부 지원 현금 수급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연간		3.7	436.4	16.0
자녀양육 지원금	출산	연간	1.7	69.4	1.1
	0-5세	연간	10.9	342.3	37.3
	6세 이상	연간	1.0	140.3	1.4
기타현물지원	연간		0.7	56.3	0.4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표 41].

〈표 7〉 근로장려금, 유가보조금 및 기타 환급금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근로장려금	1.9	108.0	2.1
유가보조금	1.7	345.7	5.7
연말정산 환급금	23.8	77.5	18.2
종합소득세 환급금	2.7	72.3	1.9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표 43].

재정패널의 가구원 조사에서는 가구원의 소득, 지출, 공적연금·민간보험 납부 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또한 소득세 공제 및 납부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래 표는 근로소득 가구원과 종합소득 가구원의 공제내역을 나타낸다.

〈표 8〉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구분	세부항목	공제 가구원		연말정산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82.4	162.3	133.6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77.7	160.9	124.8
	보장성 보험료	59.0	15.3	8.9
의료비	의료비	17.8	30.3	5.3
교육비	교육비	19.2	65.8	12.3
주택자금	주택자금	9.1	210.5	19.1
	주택마련저축	3.1	47.8	1.5
	월세	0.9	24.8	0.2
기부금	기부금 소득공제	1.4	303.8	3.9
	기부금 세액공제	24.6	18.1	4.4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1.6	45.8	0.7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0.0	0.0	0.0
	퇴직연금	2.2	24.8	0.6
	연금저축	12.1	36.3	4.4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조합출자 등	0.1	170.0	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3.3	254.6	133.3
우리사주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출자	0.5	341.6	1.6
기타	기타 소득공제	1.0	91.3	0.9
	기타 세액공제	0.2	41.8	0.1
결정세액	결정세액	100.0	143.8	143.8

주: 1)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출.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결정세액 계산에 서는 세금이 0원인 케이스를 포함시켜 계산함.

2) 기부금 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과거 기부금의 이월로 인해 소득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표 51].

〈표 9〉 종합소득신고 공제 현황

구분	세부항목	공제 가구원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비율(%)	평균 금액(만원)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34.5	151.3	51.5
기부금	기부금 소득공제	1.2	151.7	0.8
	기부금 세액공제	2.7	18.3	0.4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0.8	47.8	0.3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0.0	0.0	0.0
	퇴직연금	0.1	36.0	0.0
	연금저축	3.3	29.8	0.9
투자조합출자 등	투자조합출자 등	0.0	0.0	0.0
표준공제	표준공제	65.9	7.2	4.8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0.0	0.0	0.0
기타	기타 소득공제	5.4	263.9	14.3
	기타 세액공제	14.4	26.4	3.8
성실사업자대상 공제 항목	의료비	0.3	58.7	0.2
	교육비	0.3	52.2	0.2
결정세액	결정세액	100.0	102.5	102.5

주: 1)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 (n=921) 을 기준으로 산출.

2) 기부금 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과거 기부금의 이월로 인해 소득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표 53].

가구원 의식조사에서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신뢰도, 세금납부 및 복지수혜 수준에 대한 평가,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납세와 관련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해 조사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크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후 소득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복지수준에 대해서는 55%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4%가 확대해야 한다고, 11%가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0〉 소득격차

구 분	항목	분포(%)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크다	38.4	
	약간 크다	49.5	
	보통이다	11.1	
	별로 크지 않다	0.8	
	전혀 크지 않다	0.1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커질 것이다	39.1	
	약간 커질 것이다	49.7	
	보통이다	10.3	
	약간 작아질 것이다	0.8	
	매우 작아질 것이다	0.1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정부 정책	①	28.9
		②	43.0
		③	21.5
		④	5.9
	개인 노력	⑤	0.7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표 59].

〈표 11〉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구 분	항목	분포(%)
현재 복지수준 적정성 평가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10.9
	적당하다	55.0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34.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표 60]의 일부분.

IV. 재정패널을 활용한 연구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표되었다.⁵⁾ 재정패널을 활용한 모든 연구를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본 장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매년 재정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매년 20편 내외의 논문들이 발표되며, 발표된 논문은 재정패널 웹사이트(<http://panel.kipf.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서는 재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범위를 좁혀 소개한다.⁶⁾ 아래 표는 이들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보여준다.

〈표 12〉 재정학연구 게재 논문 중 재정패널 활용 연구의 예

조세정책의 효과	소득불평등·계층이동
송헌재(2012)	박기백(2010)
송헌재·성명재(2012)	김성태·김명규·임병인(2014)
박상원·성명재(2013)	박기백(2014)
송헌재(2013)	김성태·김명규·임병인(2016)
송헌재·고선·김지영(2013)	
안새롬·송원호(2014)	인식·투표참가
정원석·강성호(2017)	
조하영·고은비·송헌재(2017)	전병힐(2013)
	김우철·신영호(2016)
복지수혜	
우석진·김인유·정지운(2014)	재정패널 표본 분석
정지운·김성태·임병인(2015)	송헌재(2012)

재정패널조사의 취지와 맞게 재정패널을 활용한 많은 연구에서 조세제도의 효과 또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송헌재(2012)의 연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의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 유입 및 노동공급이 늘어났지만,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 노동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지는 근로장려세제의 점증구간 연장, 점증률 상향조정 및 최대급여수준 상향조정을 제안하였다.

송헌재·성명재(2012)의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세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4조원의 근로소득세수를 감소시켰지만, 과표양성화를 통해 사업소득세수를 2.3조원 증가시켜, 총 세수를 9천억원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사업소

6) 혹시 누락된 논문이 있다면 이는 저자의 검색 실수로 인한 것이며, 고의로 또는 특정 기준에 의해 빠뜨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득 과표양성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0.23%p 확대되지만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0.19%p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0.04%p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원·성명재(2013)의 연구에서는 단순종량세로 과세되는 담배소비세를 물가연동형으로 개편할 경우 소득계층별 담배소비 변화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물가지수 선택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분석한 소득계층별 담배 소비지출 및 세부담 분포를 바탕으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모의실험을 통해 제도개편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CPI 또는 경상소득증가율을 연동지수로 채택할 경우 실효과세율은 유지되지만 담배소비를 억제시키지는 못하며, 영국과 같은 가산율 제도를 도입하여 경상소득증가율에 3~5%p를 가산할 경우 1.4~2.7% 정도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송헌재(2013)의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연구 당시 예정된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7.5~9.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기부금 규모가 약 12.5% 감소하는 반면 세수증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송헌재·고선·김지영(2013)의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이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 이후 12월 15일까지 2006~07년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중 일부를 환급하였으며, 동 연구에서는 환급받은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를 비교하여 환급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은 2009년 경상적 소비지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행 경비 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특성상 환급 대상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저자들은 분석했다.

안새롬·송원호(2014)의 연구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감액 및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제도의 도입 이후 다자녀 가구는 감액된 금액만큼 전기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요금은

감액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자동차 구입이 평균 0.1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석·강성호(2017)의 연구에서는 2011년 연금저축 소득공제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연금저축 납입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2015년 700만원으로 확대시킨 제도의 효과를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2011년 세제혜택 확대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연금저축 납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은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세제혜택 추가 확대의 효과를 전망한 결과, 고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납입액을 약 3% 늘리는 반면 중산층은 약 1% 늘릴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하영·고은비·송헌재(2017)의 연구에서는 소비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조세지출예산서,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 제도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였다. 특히 재정패널자료의 경우 개인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활용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조세지출 금액을 추정하였다.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현금영수증 제도의 편익, 즉 과세표준 양성화로 인한 세입확대 규모가 제도의 비용, 즉 조세지출 규모에 비해 3-6.4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세와 관련된 논문의 빈도에는 못 미치지만 저소득층의 복지수혜와 관련된 논문도 일부 발표되었다.

우석진·김인유·정지운(2014)의 연구에서는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의 문화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바우처 대상 가구가 비대상 가구에 비해 문화비를 4.7만원 정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 가구이면서 실제로 문화바우처를 받은 가구의 경우 문화바우처를 5만원 받을 경우 문화비 지출이 최소 3.25만원에서 최대 22.35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운·김성태·임병인(2015)의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의 소득환산 시 음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수 가구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의 소득환산액 인정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반면 기본재산액 수준의 상향 조정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조세 및 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박기백(2010)의 연구에서는 1차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의 조세부담 및 복지혜택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누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및 소비세도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지만 누진도는 소득세에 비해 낮았다. 또한 공적이전 혜택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의료혜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또한 지역별 재산세 격차가 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김명규·임병인(2014)의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근로소득자 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적용된 소득세법 개편의 형평성 및 누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상위분위인 10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분위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세전지니계수와 세후지니계수의 차이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3.6%에서 3.9%로 증가하였다. 또한 소득세법의 누진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백(2014)의 연구에서는 유형별 소득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의 5가지로 구분한 후 소득유형 간 공분산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소득의 증가는 다른 소득과 음(-)의 공분산 관계가 있어 노동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사업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본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득분배가 악화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김성태·김명규·임병인(2016)의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 계층 이동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동시에 빈곤한 구조적 빈곤과 소득은 빈곤하지만 자산은 빈곤하지 않은 확률적 빈곤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빈곤계층에서 벗어날 이행확률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확률적 빈곤 계층은 일시적 소득빈곤 상태인데 반해 구조적 빈곤 계층은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복지, 소득재분배에 관한 논문 뿐만 아니라 투표 참가, 세금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전병철(2013)의 연구에서는 행정동별 집계자료 및 재정패널을 이용한 미시자료를 활용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행정동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지방세수 및 복지수급자 비율 등의 집계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계변수만을 활용한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의 개인별 변수로부터 상정한 주민투표 참가율을 실제 주민투표율과 근접하게 하는 GMM 추정방식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특성이 투표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은 투표 참가 여부와 뚜렷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 수준, 소득, 부동산 자산이 높을수록 투표 참가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철·신영호(2016)의 연구에서는 5차년도 재정패널조사에서 질문한 통일세 신설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거나 공적연금납부액이 많은 경우 통일세 신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할 확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작다고 느끼는 경우 통일세 신설에 부정적인 답변을 할 확률이 높아져 응답자의 교육 및 소득 수준, 수평정 공평성 등에 대한 인식이 통일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패널 표본의 특성 자체를 분석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송헌재(2012)의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여 이들 간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재정패널 표본 유지율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V.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개요 및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의 예를 소개하였다. 2008년 재정패널조사가 시작된 이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조사 자료의 특성상 다른 조사를 통해 알기 어려운 납세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조세제도의 효과와 영향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발표되었다. 이는 가구와 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학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설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재정패널조사가 이러한 역할을 꾸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정패널조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조사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표본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0차년도 기준 재정패널조사의 원표본 유지율은 75.2%, 유효표본 유지율은 78.3%로 국내 다른 패널조사 및 해외 유명 패널조사의 10차년도 기준 유지율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표본이탈 및 이에 따른 표본의 노후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따라서 패널의 연속성의 유지하면서도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정패널 조사는 조사의 목적에 맞게 조세납부 및 복지수혜 현황을 상세히 조사한다. 하지만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개편이 일어난다. 따라서 패널조사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문항설계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재정패널조사가 우리나라 조세 및 복지 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경제 주체인 가구와 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조세·복지제도를 설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7) 10차년도 조사 기준으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원표본 유지율은 75.5% (한국고용정보원, 2012),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원표본 유지율은 67.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미국 PSID의 원표본 유지율은 75.2% (한국고용정보원, 2012) 임.

〈 참고 문헌 〉

- 김성태 · 김명규 · 임병인,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형평성 및 누진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7권 제1호, 2014, pp. 53-79.
- _____, 「우리나라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이행추이 분석」, 『재정학연구』, 제9권 제3호, 2016, pp. 127-156.
- 김우철 · 신영호, 「통일세 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9권 제2호, 2016, pp. 107-142.
- 박기백, 「‘재정패널’을 이용한 가계 부담 및 혜택 분석: 분위별 · 지역별 분포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3권 제2호, 2010, pp. 1-28.
- _____, 「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재정학연구』, 제7권 제2호, 2014, pp. 95-116.
- 박상원 · 성명재, 「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 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6권 제2호, 2013, pp. 1-40.
- 송헌재, 「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 2012, pp. 97-133.
- _____,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가구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재정학연구』, 제5권 제4호, 2012, pp. 37-62.
- _____,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재정학연구』, 제6권 제4호, 2013, pp. 151-178.
- 송헌재 · 고 선 · 김지영,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제6권 제2호, 2013, pp. 89-117.
- 송헌재 · 성명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2호, 2012, pp. 157-194.
- 안새롬 · 송원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 전기요금 감액, 자동차 취 · 등 록세 면제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7권 제4호, 2014, pp. 83-109.
- 우석진 · 김인유 · 정지운,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재정학연구』, 제7권 제1호, 2014, pp. 29-51.
- 전병힐,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가 결정요인 분석」, 『재정학연구』, 제6권 제1호, 2013, pp. 95-129.
- 정원석 · 강성호,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재정학연구』, 제10권 제1호, 2017, pp. 215-240.
- 정지운 · 김성태 · 임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의 수직적 · 수평적 공평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3호, 2015, pp. 59-87.
- 조하영 · 고은비 · 송헌재,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제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17, pp. 143-179.
- 통계청, 「2016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6. 12. 20.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4/1/index.board?bmode=read&aSeq=358202)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고용조사분석센터,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보고서 2016-30, 20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조사자료의 특성 - 가계동향조사자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정패널조사 테크니컬리포트, 세수추계패널센터, 2016.

_____, 『9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수추계패널센터, 2017.

10th Anniversary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Its Meaning and Accomplishments

Sungmun Choi*

Abstract

2018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Since its inception in 2008, NaSTab has provided researchers with unique opportunities to study the effects of tax and welfare benefits in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main attributes and contributions of NaSTab to help researchers better understand NaSTab and increase the usage of the dataset. It also summarizes previous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is journal using NaSTab and discusses future agenda for increasing its role as policy analysis tools.

Key Words: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ax and welfare policy, fiscal policy analysis

JEL Code: H20, H31, H53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e-mail: evenschoi@gmail.com